

대법원 2017도20628

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등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권순일)은 피고인 이창명(방송인)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(대법원 2018. 3. 15. 선고 2017도20628 판결)

1. 공소사실의 요지

▣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
- 피고인은 2016. 4. 20. 23:01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에 있는 동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:18경 같은 구 63로 7 앞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.

▣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

- 피고인은 2016. 4. 20. 23: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63로 7에 있는 성모병원 앞 교차로를 63빌딩 방면에서 한양아파트 앞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인도 위의 지주를 들이받고도 사고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하였다.
- 결국 피고인은 위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인도 위의 지주를 약 334,1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 등

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.

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
- 피고인은 2014. 6. 14.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에 있는 양재IC 근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. 2. 17.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.

2. 소송의 경과

■ 제1심(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4. 20. 선고 2016고단3768 판결)

-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의 점 : 무죄
- 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죄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유죄 선고(벌금 500만 원)

■ 원심(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11. 16. 2017노837 판결)

-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
- 원심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제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: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
 - 이 사건 운전행위는 2016. 4. 20. 23:00경부터 같은 날 23:20경까지 이루어졌는데, 다음 날 20:35경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액에서 알콜이 검출되지 않았음
 - 검사는 피고인과 그 일행 6명이 균등하게 나누어 마셨음을 가정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.102% 내지 0.143%라고 주장하나, 피고인과 그 일행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, 피고인이 섭취한 알콜의 양은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함
 -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얼마만큼

의 알콜을 섭취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, 그 밖에 피고인의 시간당 혈중알콜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충분히 확정되지 않음

-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음주량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
-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,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한 시각, 음주속도 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.05%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.05%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

나. 판결선고 결과

- ▣ 검사의 상고기각(음주운전 부분 무죄 확정)
- ▣ 이유
 -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